

# 광주·전남 하루 4명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다

### 의사 가장 적은 전남 최악의 의료 취약지...광주도 공공의료기관 없어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필요

광주·전남에서 하루에 4명 이상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적고, 광주는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의료격차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17개 광역시·도의 ▲시도별 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남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 부족하고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가 높은 지역으로 지목됐다.

광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반해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광주와 전남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총 152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명 꼴이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10만명)당 사망률로 환산한 치료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43.80명이었다.

전남은 47.46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였고, 광주는 44.71명으로 8위를 기록해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의사수는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에 대처하기 위

해서는 진료과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 300명 이상 종합병원 의사수를 인구 1000명 단위로 환산했다.

환산 결과 전남은 인구 1000명당 300명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0.47명으로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0.49명, 충북 0.54명, 경북 0.55명, 경남 0.57명 순으로 전국 평균은 0.79명이었다. 광주는 1.04명으로 서울(1.59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지역) 내 300명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광주·대전·울산·세종이 '0%'로 300명 이상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강원도(중진료권 6개 중 300명 이상 공공병원 1곳)는 17%의 설치율을 보여 뒤를 이었고 인천이 25%, 부산·경북·전남·경기 33% 순이었다.

전남은 6개 중진료권에 2개의 300명 이상 공

공병원이 있어 6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광주·전남에서 의사 혹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 발생률이 높다"며 "특히 전남은 도서 산간 지역이 많고, 국립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제안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 신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무관 49명 전보인사 광주청 자치경찰부장 박경수 전남청 공공안전부장 이인상

경찰청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광주경찰청 자치경찰부장에 박경수 울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49명의 전보인사를 16일 단행했다.

신임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는 반기수 경기도 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이 임명됐다. 정진관 광주광산경찰서장은 경기도 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이인상 경기도 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임명됐다. 김영근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게 됐다.

고범석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경찰청 국무조정실로 가게 됐고, 정희영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을 맡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 광주 5개 마을버스 업체, 재정 지원 촉구 서명운동 돌입

#### 31일까지 85개 노선 탑승자 대상

광주지역 버스업체들이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나라운수',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광주마을버스조합은 광주 시내 마을버스 운행 85개 노선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 시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운전기사들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조합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적자상황 속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료 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주고 있음에도 회사를 운

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적자상황속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다보니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하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명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2월 초 광주규정장협의회장과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탄원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규정장 협의회를 통해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향식을 통해 시에 요구하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에도 조합은 코로나19 상황속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에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4000여명의 지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한시적으로 적자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분배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6일 오후 6시 기준 500여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통시장 '상생 장터' 활기  
말바우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상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상생 장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SPC그룹 상품 출하 막은 노조원 2명 징유

중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C그룹의 상품 출하를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영)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16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호남사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트럭 10대의 진입을 20여분간 막아 파리바게트 등 SPC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3일 호남사니 광주공장 정문에서 집회 중 대처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등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차량 기사들에게 집회 취지를 설

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며 소극적인 파케팅 방식을 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길을 터준 뒤에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던 점, 업무가 한 시간가량 지연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면서 "부당한 집회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왜곡' 지만원 구치소 수감...2년 복역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는 각 지만원(82)씨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일명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